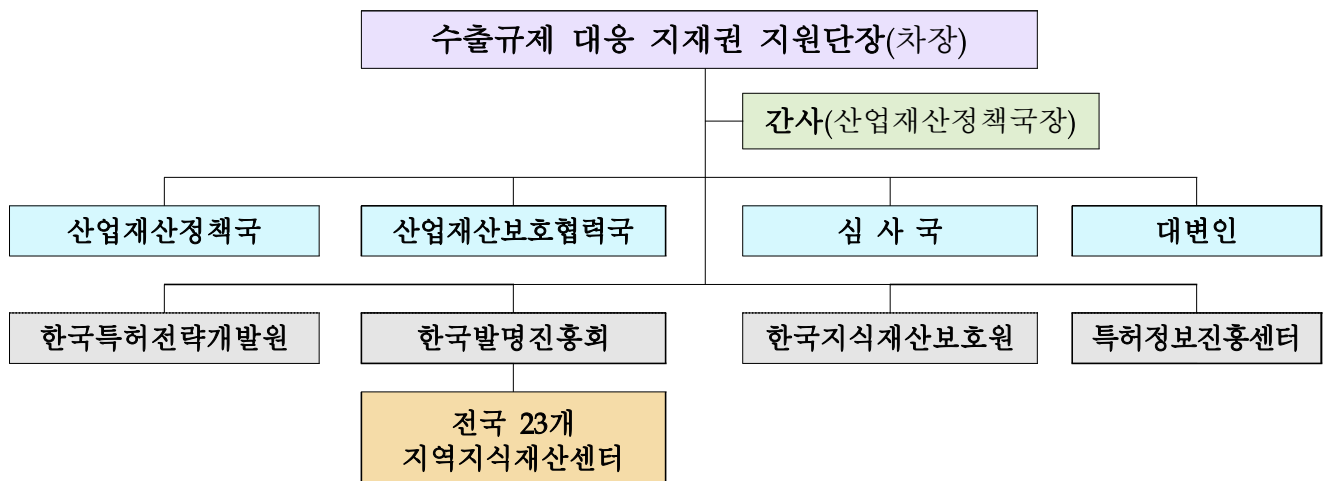


문 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과 장 한덕원 사무관 김준일	042-481-8254 042-481-5156
  2019년 8월 26일(월) 배포(09:00)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조직 확대 개편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일본의 수출규제 지재권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수출규제TF를 확대 개편하여 26일 오후 3시, 정부대전청사청에서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단장: 특허청 차장)’ 발대식을 가진다.
- 특허청은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된 지난 7월 4일부터 수출규제 핵심품목에 관련된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규제TF’를 가동해 왔다.
 - 특허청은 앞으로 유관기관*을 포함하는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국 23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한다.
- * 특허전략개발원, 발명진흥회, 지식재산보호원, 특허정보진흥센터

<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 구성 체계 >



- 현장에서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이 접수되면,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은 해결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계획이다.
- 우선, 대체기술의 신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특허 분석·전략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IP 컨설팅, 특허대응전략 등을 제공하고, IP-R&D 전략지원 등의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 또한, IP 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대학·공공연의 우수 특허가 관련 중소기업에 이전되도록 지원한다.
- 아울러, 특허 분쟁에 휘말리거나, 분쟁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공익 변리사, 특허분쟁 컨설팅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수출규제 관련 지재권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1670-7072)’ 또는 전국 23개 ‘지역 지식재산 센터(1661-1900)’를 통해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 천세창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장(특허청 차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대일 의존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대체 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위해서는 특허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 “이번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재권 강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설치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김준일 사무관(☎042-481-51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설치 현황

(’19. 7. 31 기준, 대표번호: 1661-1900)

광역시도	센터명	운영기관
서울	서울	(재)서울산업진흥원
인천	인천	인천상공회의소
경기	경기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
	수원	수원상공회의소
강원	강원	강원도경제진흥원(원주)
	춘천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
충북	충북	청주상공회의소
	충주	충주상공회의소
충남	충남	충남북부상공회의소(천안)
세종	세종	한국발명진흥회 세종지부
대전	대전	(재)대전테크노파크
경북	경북	포항상공회의소
	구미	구미상공회의소
	안동	안동상공회의소
경남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진주	진주상공회의소
대구	대구	대구상공회의소
부산	부산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울산	울산	울산상공회의소
전북	전북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전주)
전남	전남	목포상공회의소
광주	광주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제주	제주	제주상공회의소
총 23개 센터		